

KEF 경총
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

2021. 1.

< 조사개요 >

※ 「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경제전문가(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) 214명(응답자 기준)을 대상으로 (주)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(2020년 12월 조사)

< 요약 >

1. 응답자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4%

- ▶ 응답자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주요기관들보다 보수적으로 전망
 - ※ 동 조사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2.4%는 한국은행(3.0%*), KDI(3.1%), OECD(2.8%) 같은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낮은 수준
 - * 기본 시나리오 전망. 비관 시나리오 전망치는 2.2%

2. 향후 우리 경제 상황 전개 모습은 「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(나йки형 회복)」 55.1%

- ▶ 그 외 응답은 'L자형 장기침체' 17.8%, 'V자형 반등(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)' 13.6%, 'W자형 더블딥(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)' 10.7%로 나타남.

3.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충격 체감도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하고,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조사

- ※ 충격체감도 : IMF 외환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고,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체감 충격을 이와 비교하여 평가(응답자들의 충격체감도 수치를 평균한 값)
- ▶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충격체감도(평균치)는 IMF 외환위기와는 유사*하고,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3.5% 크게 체감
 - * IMF 외환위기를 100으로 볼 때 코로나19 위기 충격체감도는 101.7

4. 21대 국회의 국가 재정 운용 기초, 「재정 확대,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한다」 48.1%

- ※ 그 외 응답은 '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' 22.4%, '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' 21.5%, '긴축재정이 필요하다' 7.9% 순

5. 산업 구조조정은 「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」 49.3%

- ※ 그 외 응답은 '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' 36.6%, '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' 14.1% 순
- ▶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해당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'정부주도' 보다는 '민간주도'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

6. 상속세 최고세율 「인하」 55.9%, 「인상」 17.8% 법인세 최고세율 「인하」 46.0%, 「인상」 14.6%

- ※ 상속세 최고세율 '현 수준 유지'라는 응답은 26.3%, 법인세 최고세율 '현 수준 유지'라는 응답은 39.4%로 집계
- ▶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55.9%가 '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'고 답했고,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6.0%가 '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'고 답변

7. 美 바이든 당선이 트럼프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「큰 차이 없을 것」 59.3%, 「긍정적 영향」 36.0%, 「부정적 영향」 4.7%

- ▶ 긍정적 영향*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'글로벌 수출 증가' 67.5%, '對美 수출 증가' 24.7%, '신규 사업 기회 확대' 6.5% 순으로 응답

* 美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'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'이라고 응답한 전문가(36.0%)를 대상으로 조사

1 응답자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4%

□ 조사에 응답한 경제전문가*들의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4%로 나타나 국내외 주요기관들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* 전국 4년제 대학 경제·경영학과 교수 중 응답자 214명

○ 2.4%는 한국은행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성장률 3.0%보다는 훨씬 낮고, 비관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성장률 2.2%보다 다소 높은 수준

※ 한국은행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별 가정

- ▶ 기본 시나리오(3.0%) 가정 :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.
- ▶ 비관 시나리오(2.2%) 가정 : 코로나19의 진정속도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거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.

○ 또한 이는 기획재정부(3.2%), KDI(3.1%), OECD(2.8%)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.4~0.8%p 낮은 수준

< 참고 > 국내외 주요기관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

| 구분 | 한국은행 (‘20.11.26) | KDI (‘20.11.11) | 기획재정부 (‘20.12.17) | OECD (‘20.12.1) | IMF (‘20.10.13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전망치 | 3.0% [기본 시나리오] | 3.1% | 3.2% | 2.8% | 2.9% |

주 : ()안은 전망시점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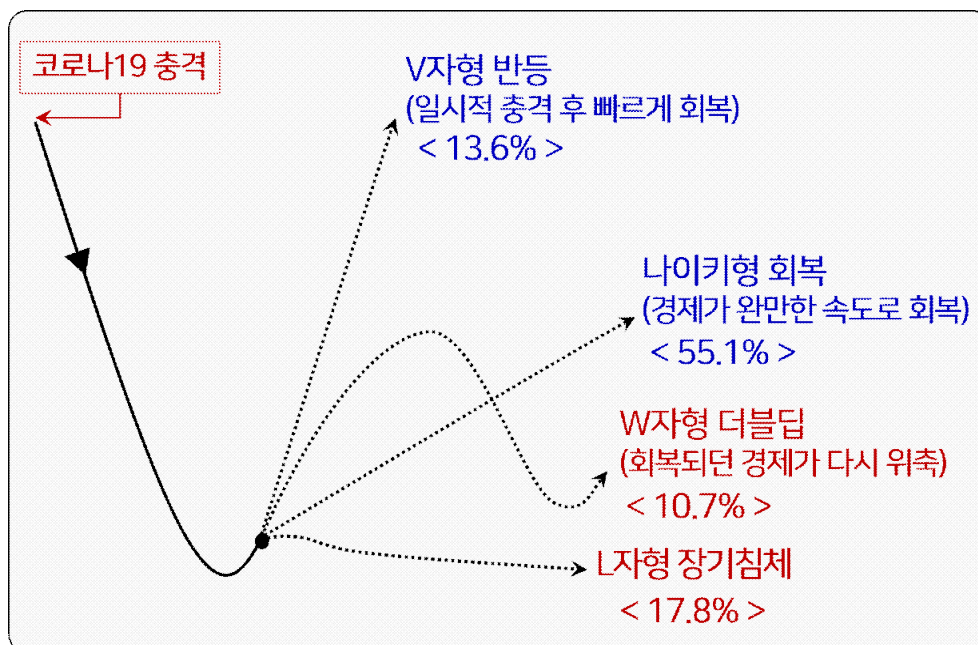
향후 경제 상황, 「완만한 속도로 회복」 55.1%

□ 향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묻는 설문에 대해 '나이키형 회복(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)'이라는 응답이 55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그 외 응답은 'L자형 장기침체' 17.8%, 'V자형 반등(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)' 13.6%, 'W자형 더블딥(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)' 10.7%로 나타남.

※ '기타' 응답은 2.8%로 집계

< 그림 1. 향후 우리 경제 상황 전개 모습 전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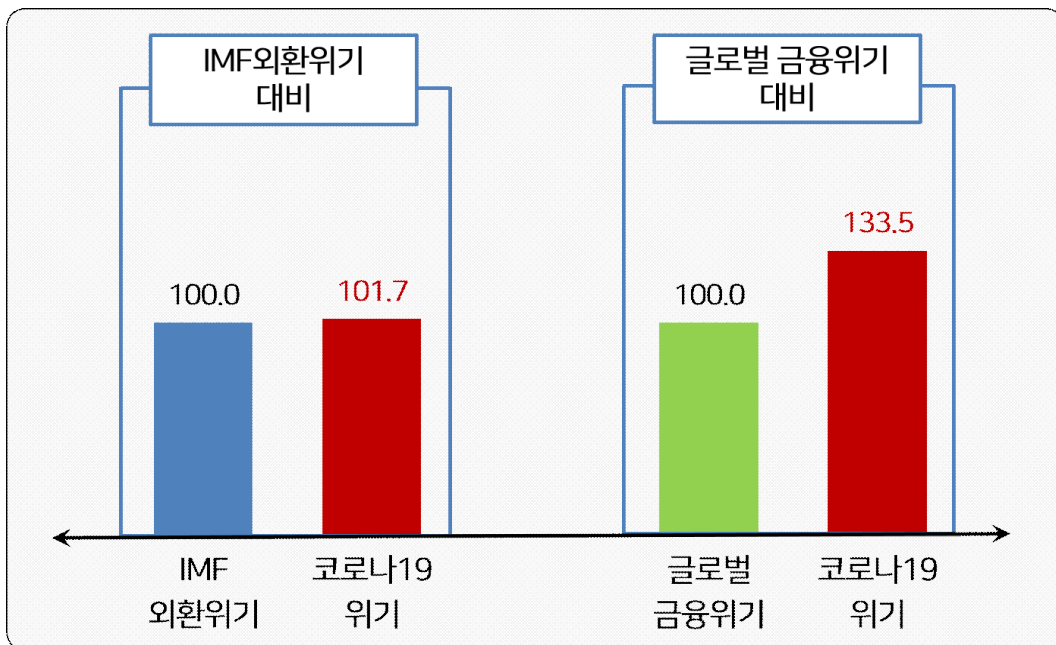


코로나19 위기 경제적 충격체감도,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하고,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커

-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하고,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더 큰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체감도*(평균치)를 조사한 결과,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와는 유사하고,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3.5%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.

* IMF 외환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고,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체감 충격을 이와 비교하여 평가

< 그림 2.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체감도(평균치) >



4

「재정 확대,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한다」 48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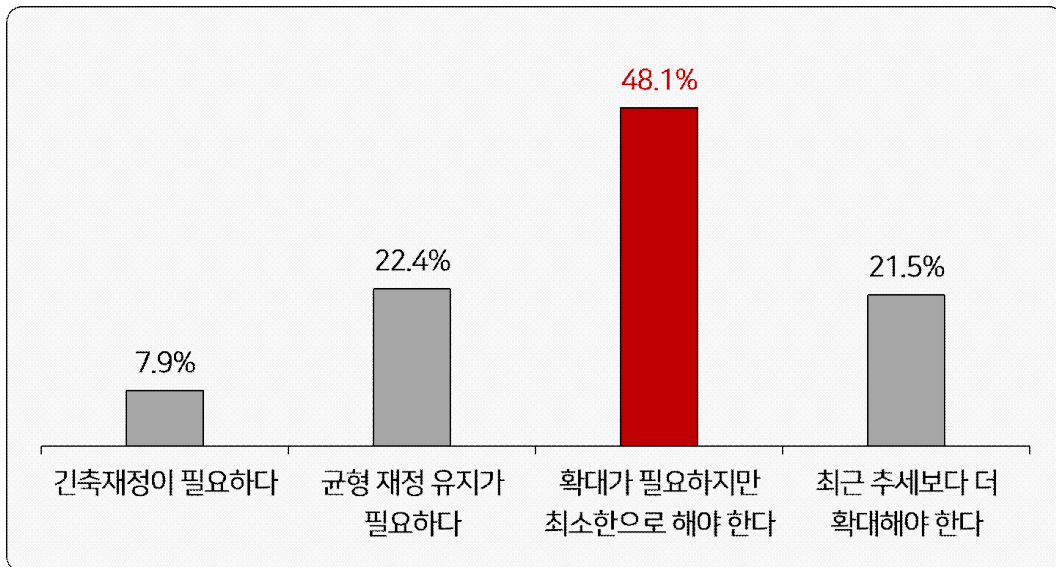
□ 21대 국회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운용 기조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48.1%가 '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'고 답변

○ 그 외 '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'라는 응답은 22.4%, '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'라는 응답은 21.5%, '긴축재정이 필요하다'라는 응답은 7.9%로 집계

< 표 1.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국가 재정에 대한 운용 기조 >

| 구분 | 응답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| 7.9% |
|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| 22.4% |
|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| 48.1% |
|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| 21.5% |

< 그림 3.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국가 재정에 대한 운용 기조 >



5

산업 구조조정은 「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」 49.3%

-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49.3%가 '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'고 답변
- 그 외 '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'라는 응답이 36.6%, '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'라는 응답은 14.1% 순으로 집계

< 표 2. 산업 구조조정 방향 >

| 구분 | 응답률 |
|---|-------|
|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 | 49.3% |
| 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| 36.6% |
| 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| 14.1% |

-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해당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'정부주도'보다는 '민간주도'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됨.

6

상속세 최고세율 「인하」 55.9%, 「인상」 17.8%
 법인세 최고세율 「인하」 46.0%, 「인상」 14.6%

□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55.9%가 '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'가 필요하다고 답했고, 응답자의 46.0%가 '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'가 필요하다고 답변

○ **(상속세)** 그 외 응답은 '현 수준 유지' 26.3%, '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세율 인상' 17.8%로 집계

-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
※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%(‘21년 기준)

※ 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고, 10개국은 세율을 낮게 차등적용하고 있음.

< 표 3.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 >

| 구분 |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 | 現 수준 유지 |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세율 인상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응답률 | 55.9% | 26.3% | 17.8% |

○ **(법인세)** 그 외 응답은 '현 수준 유지' 39.4%, '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' 14.6%로 집계됨.

-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*한 반면,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(22%→25%, 중앙정부 기준, '18년)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
*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(% , 중앙정부 기준, OECD)

[美] 35('10)→ 21('20) [日] 30('10)→ 23.2('20) [英] 28('10)→ 19('20)

< 표 4.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 >

| 구분 |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 | 現 수준 유지 |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응답률 | 46.0% | 39.4% | 14.6% |

7 美 바이든 당선이 **트럼프 재선에 비해**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「**큰 차이 없을 것**」 59.3%, 「**긍정적 영향**」 36.0%, 「**부정적 영향**」 4.7%

□ 美 바이든 후보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경우에 비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, ‘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,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’이라는 응답이 59.3%, ‘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’이라는 응답은 36.0%*로 나타남.

* 매우 긍정적 3.7% + 다소 긍정적 32.2%

○ 그 외 ‘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’이라는 응답은 4.7%(매우 부정적 0.9% + 다소 부정적 3.7%)에 그침.

< 표 5. 美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>

| 구분 | 응답률 |
|--|-------|
|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| 3.7% |
|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| 32.2% |
|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| 36.0% |
|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,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 | 59.3% |
|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| 4.7% |
|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| 3.7% |
|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| 0.9% |

□ 긍정적 영향*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‘글로벌 수출 증가’ 67.5%, ‘對美 수출 증가’ 24.7%, ‘신규 사업 기회 확대’ 6.5% 순으로 응답

* 美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‘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’이라고 응답한 전문가(36.0%)를 대상으로 조사

< 표 6. 바이든 후보 당선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>

| 구분 | 응답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다자주의 회복에 따른 통상여건 안정화로 글로벌 수출 증가 | 67.5% |
| 확장재정을 통한 미 경기회복으로 대미 수출 증가 | 24.7% |
|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내기업의 신규 사업 기회 확대 | 6.5% |
| 기타 | 1.3% |

주 : ‘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’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전문가(경제·경영학 교수*)의 의견을 수렴하여, 향후 對정부 정책 건의 등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* 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

2. 조사기간 및 조사 수행기관

2020년 12월

※ 조사수행기관 : (주)글로벌리서치

3. 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유선 조사를 병행하였음.

4. 주요 조사항목

- 2021년 경제 전망(경제성장률, 회복경로)
-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
- 향후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의견
-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의견
- 상속세·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
- 美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5. 회수설문 수

| 구분 | 회수설문 수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전국 4년제 대학 경제·경영학과 교수 | 214명 |